

튼실한 복지안전망 구축 · 탄소중립 전환 '전력'

아중호수 · 전주지방정원 가는 길 편해진다

전주시, 아중호수 동측 동부대로 일부 구간 도로환경 개선 등 추진

전주시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 통해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15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튼실한 복지안전망 구축,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을 비전으로 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복지안전망 강화 △노인복지 추진 △장애인 복지체계 구축 △여성 권리·가족 역량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전주생태 동물원 추진 등이다.

먼저 시는 초거대 AI를 활용한 위기 가구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도입할 계획이다. 단전·단수 등을 겪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 복지 구현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75세 이상 고위험 돌봄 어르신에게 △어르신 병원동행 사업 △방문 의료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나아가 지난해보다 1100여 명이 늘어난 1만4197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한다.



전주시는 15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튼실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비전으로 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 시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북권역재활병원 연계 건립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경력직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여성 취·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동복지 분야의 경우 아동 돌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제공을 위해 돌봄시설의 연장 운영 확대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전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실행력 높은 지역 맞춤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조기에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339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63대(승용 1875대, 화물 68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드론 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추적 및 실시간 모니터링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끝으로 시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한 천연기념물 보존관에 영구장비를 입은 천연기념물 매킨류의 입식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전면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던 드림랜드 놀이시설을 안전성 검사를 마친 후 오는 3월 재개장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와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로서 더 튼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누구나 일상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 아중호수와 전주지방정원 인근 도로환경이 개선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친수·여가공간인 아중호수와 현재 조성 중인 전주지방정원(현 자연생태체험학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6억 원을 투입해 아중호수 동측 호동골 방면 동부대로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장은 지난해 도심 속 친수공간인 아중호수와 전주지방정원 일대를 시민과 여행객이 전주의 문화와 역사, 예술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하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재창조하는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가 없는 동부대로 130m 구간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기존 비포장 임시주차장을 재정비해 단절된 보행 동선을 연결하고, 약 4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

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날 중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올해 추가 조성되는 아중호수 수변 탐방로에 따라 늘어날 해당 지역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향후 조성될 전주지방정원 등 주변 관광지 간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전주 동부권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기 광역도시개발사업장은 "이 사업이 전주 동부권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아중호수 주변 관광지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신산업용복합지식산업센터 대강당에서 진흥원 이영로 원장 및 전북 지역 ICT기업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주시, 구비서류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서 방문 신청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

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임대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대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으로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일반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축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전세 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 가져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4일 신산업용복합지식산업센터 대강당에서 진흥원 이영로 원장 및 전북 지역 ICT기업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디지털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W(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XR(확장현실) 관련 콘텐츠 개발 사업, 인력양성사업 등 약 68억 규모의 6개 분야 16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 ICT기업의 현황진단과 지속적인 밀착 소통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역기업의 수요에 최적화된 사업개발 계획 및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디지털미디어테크분야 콘텐츠 제작

및 인력양성 사업 △ICT, SW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디지털혁신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과 △창업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영로 진흥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ICT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지역 ICT산업 분야 종사하고 미래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과 인재들이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분야인 ICT산업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의 중점 사업이다. 지역 ICT기업의 역량을 집중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28일까지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완산구민 결의로 다가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평화동1가 1지구 화전경로당(완산구 꽃밭정8길 9)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에 개최 완료하였다.

추가로 오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사업추진 절차 및 주요 문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서로 진행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측량된 종이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현실 경계나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로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산구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년부터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

를 확정한다. 새로이 확정된 경계로 인해 발생한 면적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